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파리 유충 활용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화·관광 지역 젊은 예술가 알리는 '아티스트 페어' 개최

산업·경제 신기술로 이동문제 해결... '스마트 모빌리티 도전'

사회·복지 경제활동 지원·인프라 개선 등 고령층 복지 다양화
다문화 도시 정체성 만드는 신규이민자 정착전략
취약계층 주거 상실 심화에 대책 가이드라인 마련

행재정·교육

'민원편의·비리근절' 공공업무 자택배달 서비스

환경·안전

폐 매립지에 대규모 태양열발전소 짓는다
천연가스 사용 산업체 비율 연말까지 95% 달성
교통·건물 등 4대 분야 '기후변화 액션플랜' 수립

도시계획·주택

'임대료 인상 5년간 동결' 더 강한 '상한법' 시행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베를린 신희완
 유진경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하노버 이희재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뉴욕 윤규근
 이수진
 이정근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시애틀 강민규

시카고 김영준
 강기향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상파울루 김현아
스톡홀름 문선우
 허윤희
바르셀로나 진광선
 박정수
싱가포르 이은주
런던 정기성
비엔나 안병선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자카르타 박재현
도쿄 박재호
오사카 권용수
베이징 박성은
상하이 문혜정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김용훈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시드니 정용문

파리 유충 활용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분리수거 문화 정착 목적...쓰레기 수익전환 사업도 시행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市 / 환경·안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市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수거 문화를 정착하고자 쓰레기 수익전환 사업, 파리 유충을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쓰레기 처리 방법을 시범사업으로 도입

주요 내용

- 2015년 쓰레기 분리수거 도입 실패 이후 쓰레기 수익전환, 유기물 쓰레기 친환경 폐기 방법 등 새로운 시도
-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정책 실패
 - 2014년 쓰레기 분리수거법이 제정되면서 2015년 9월 1일부로 말레이시아 6개 주 (파항, 조호, 므라카, 느그리 쉴빌란, 프를리스, 깘다)와 2개 연방직할구(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시작
 - 유예기간 후 2016년 6월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을 시행했지만, 부족한 시민의 식과 재활용 시스템 부재 등의 이유로 실패
 - 시행착오를 겪은 연방정부는 쓰레기 수익전환 사업, 유기물 쓰레기 처리 등 시범 사업을 통해 분리수거를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
- 쓰레기 수익전환 사업(Trash for Cash Model)
 - 쿠알라룸푸르 암팡 지역이 쓰레기 수익전환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으며, 9월 22일부터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을 진행 중
 - 또한, 비정부단체(NGO)와 환경단체운동가가 암팡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천 방법, 쓰레기 수익전환 방법 등 교육
 -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국민주택사업(People's Housing Projects, PPP), B40(Bottom 40) 대상자 등 저소득층 시민을 중심으로 교육 제공
 - 쓰레기 수익전환 사업은 올해 12월부로 시범 지역을 확장할 예정
- 유기물 쓰레기 처리 사업(Organic Waste Processing Program)
 - 시정부는 4월 1일부터 쿠알라룸푸르 도매시장과 함께 곤충 동애등에(black soldier flies)를 활용한 유기물 쓰레기 처리 시범사업 추진

- 동애등에는 파리목 동애등에과의 곤충으로, 그 유충이 음식쓰레기나 찌든 음식 등을 가리지 않고 먹어 치움
- 해당 사업은 시장 내 버려진 음식물을 매립지로 옮기지 않고, 도매시장 인근에서 동애등에를 활용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
 - 동애등에의 유충과 번데기는 어류와 가축 등의 사료로 이용하고 분변토는 유기질 퇴비로 활용
- 이로써 운송비용 절감, 재활용품 처리 경로 단축 등 행정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적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환경문제 해소 기대



[그림 1] 쓰레기 수익전환 사업



[그림 2] 유기물 쓰레기 처리 사업

<https://www.thestar.com.my/metro/metro-news/2019/06/01/major-savings-from-green-programme>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19/10/01/after-2015-failure-putrajaya-to-come-up-with-new-waste-separation-scheme/>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19/10/01/after-2015-failure-putrajaya-to-come-up-with-new-waste-separation-scheme/><https://www.sinarharian.com.my/article/48852/BERITA/Politik/Hanya-takdir-ALLAH-tentukan-Anwar-PM-kelapan-atau-tidak>

<https://www.nst.com.my/news/nation/2019/10/526153/time-turn-household-waste-cash-says-zuraida>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지역 젊은 예술가 알리는 ‘아티스트 페어’ 개최

일본 교토府 / 문화·관광

일본 교토府는 예술계 대학과 젊은 문화예술인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이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가 세상에 나와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 ‘아티스트 페어 교토’(‘ARTISTS’ FAIR KYOTO)를 개최

배경

- 예술가 지망생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문화예술로 지역 활성화 도모
 - 교토에는 많은 예술계 대학이 있으며, 매년 4,000명 정도의 예술가 지망생을 배출
 - 하지만 예술가 지망생이 창작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
 - 일본 문화청이 교토로 이전되면서 문화예술을 이용한 지역 활성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활약할 수 있고 세상에 나와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체계 정비가 요구
 - 이에 교토부는 문화예술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술의 세계를 우리 삶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RTISTS’ FAIR KYOTO’를 개최

개요

- ‘ARTISTS’ FAIR KYOTO는 신인 예술가가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작품의 매력을 직접 전할 수 있도록 한 아트 페어
 -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저명한 예술가가 추천하는 신인 예술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기획
 - 자문위원회에 현역으로 활동하는 저명한 예술가 12명을 모시고, 20~30대 초반의 젊은 예술가 36명을 선출
 - 2018년에는 해당 이벤트에 작품을 출품한 45명 중 36명이 젊은 신인 예술가였음
 - 기존의 아트 페어와는 달리, 갤러리가 아니라 ‘예술가가 스스로 기획하고, 출품자가 되고, 운영하는’ 새로운 형식의 아트 페어
 - 자문위원회는 아트 페어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작품을 출품하는 등 아트 페어의 흥행을 위해 힘씀

- 홍보 팸플릿이나 웹 사이트는 일본어판·영어판을 작성해 현지 주민은 물론 관광객 등 다양한 사람이 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

성과

- 젊은 예술가의 작품 판매나 해외진출 등의 성과
 -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고, 출품 작품의 약 1/3에 이르는 젊은 예술가의 작품이 판매됨
 - 전시 작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호텔 등의 제작 의뢰나 해외 갤러리의 기획전 출전 의뢰 등 젊은 예술가의 활약을 확대하는 여러 반향을 얻을 수 있었음
 - 세계규모의 예술 지원 실적이 있는 해외 은행의 일본 국내 아트 페어 첫 협찬을 비롯해, 기획에 뜻을 같이하는 기업이 늘고 있음

<https://artists-fair.kyoto/>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신기술로 이동문제 해결...‘스마트 모빌리티 도전’

일본 / 산업·경제

일본 정부는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주민의 이동수단 확보나 공공교통망 유지라는 과제에 대처하고, 2차 교통수단의 강화를 바탕으로 관광지로 사람들을 유인하거나 지역주민의 이동 촉진을 실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스마트 모빌리티 도전’을 시작

배경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가능성 실현을 돕는 지원정책 구상
 -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확대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는 고부가가치의 쾌적한 이동을 실현하고, 폭넓은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 일본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은 장래 자율주행사회의 실현을 바라보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이동 과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스마트 모빌리티 도전’을 시작

스마트 모빌리티 도전

- ‘스마트 모빌리티 도전’은 정보공유와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 확대에 이바지하는 사업
 - ① 지역과 기업 등이 폭넓게 참가하는 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마다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지역·기업의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네트워킹을 형성
 - ② 선진적 대책에 도전하는 시범사업의 계획수립이나 효과 분석 등을 지원해 모범 사례를 추출하거나 횡단적 과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을 확대
- 국토교통성은 스마트 모빌리티 도전과 연계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추진사업’ 시행
 - 전국 각지의 MaaS(Mobility as a Service)¹⁾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실증 실험을 지원하고, 지역 교통 서비스 과제 해결을 위한 모델 구축이 목표

1) 통합교통서비스 또는 서비스형 모빌리티로, 버스·택시·카셰어링·공유자전거 등 모든 이동수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주요 이동 과제와 기대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 주요 이동 과제는 복수의 이동수단 활용 시 편리성 확보, 공공교통·도로의 혼잡, 라스트 마일(Last Mile)²⁾ 이동수단 부족, 고령자 등 이동 약자 증가 등
- 기대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는 복수의 이동수단을 통합·연계해 최적화하는 멀티모달 서비스(Multimodal Service)³⁾, 이동수단 공유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경로·가격 등을 최적화하는 공공교통 서비스 제공이나 공공교통의 합승화, 준공공 교통으로 자동차 이용, 물류 서비스와 연계 등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의 포인트는 다양한 이동수단 확보, 공공교통과 자동차의 시너지, 모빌리티와 비모빌리티의 연계, 지역 내외 협업 추진, 디지털 투자 촉진과 기반 정비에 있음

스마트 모빌리티 도전 사례

- 2019년 28개 지역·기업의 스마트 모빌리티 도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공개
 - 경제산업성이 선정한 시범지역 분석사업 9건, 국토교통성이 선정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추진사업 15건,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이 공동으로 선정한 사업 4건
- 고령화가 진행된 뉴타운을 중심으로 MaaS 실증실험을 시작
 - 주변의 상업시설이나 역 등지로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확보를 목표로 한 실증실험
 - 고베시, 주식회사 일본종합연구소, 미나토관광버스 주식회사 등이 참여한 협의회가 주관
 - 고령화가 진행된 뉴타운을 중심으로 지역 내외의 이동은 물론 목적지에서의 활동 지원까지 고려한 'MaaS-합승택시-캐시리스(Cash-less)' 앱을 개발
 - 2019년 12월~2020년 2월 중 40일가량 사업모델 검증을 진행할 예정

2) Last Mile: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거리

3) Multimodal Service: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지칭하며, 여기서는 여러 교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

https://www.mlit.go.jp/report/press/sogo12_hh_000141.html

<https://meti-journal.jp/p/6565/>

https://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smart_mobility_challenge/pdf/20190408_02.pdf

<https://www.mobilitychallenge.go.jp/introduction>

https://www.meti.go.jp/press/2019/06/20190618004/20190618004_01.pdf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경제활동 지원·인프라 개선 등 고령층 복지 다양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 사회·복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노인 현금지원 정책 외에 경제활동 지원, 부양자가 없는 고령자의 수용 관리, 음식 염가 제공, 고령 친화적 도시 인프라 개선 등 다각도로 접근하며 고령 친화적 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 중

배경

- 고령화 사회가 가속되면서 노인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발전
 - 자카르타 내에서 딱히 일할 수 있는 곳이 없게 된 고령자들의 실업과 비경제활동이 증가 중
 - 공원, 보행자도로, 보행육교 등 기존의 도시 인프라가 고령자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
 - 가족들에게 버려져 갈 곳 없는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역시 필요해짐
- 자카르타의 ‘고령 친화적 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고령층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주요 내용

- 주정부는 60세 이상 주민 중 사회경제적 하위 10%에게 매달 60만 루피아(51,000원)를 보조하는 고령층 복지정책을 2018년부터 운영 중(※ 432호 참조)
 - 2019년에는 총 40,419명의 고령자가 수혜를 받고 있으며, 77,524명(2020년), 92,533명(2021년), 107,573명(2022년)으로 증가가 예상됨
- 여기에 추가로, 자카르타 사회서비스국 사회·아동 재활과는 고령층의 창조적 경제 활동 지원을 제공
 - 사업체를 운영·구상 중인 고령자에게 약간의 현물 지원으로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어줌
 - 보통 음식이나 음료수를 판매하거나 바느질 등 수공예 제품을 만드는 가벼운 경제 활동이 주를 이룸

- 지원 대상자는 중앙정부 사회부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선정
 - 2019년에는 현재까지 75명이 수혜 대상으로 선정
-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더 고령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새로 조성
 - 보행육교 대신 횡단보도 조성, 고령자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통합형 공공 공간 조성, 대중교통시설에 엘리베이터 시설 의무화
 - 공영 간선급행버스인 트랜스자카르타의 이용 무료화
- 고령자들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음식 염가 제공 프로그램에 따라 매달 주정부 식량 안보국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
 - 일부 지역주민을 위한 음식 염가 제공 및 분배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 2018년 6호에 근거
- 가족에게 버려진 고령자를 주정부가 운영하는 트레스나 웨르다 사회주택(PSTW)에 수용하여 서비스 제공, 건강 검진, 경제활동 교육 등을 진행
 - 부양자가 없거나 치매를 앓아서 원래 거주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1,546명의 고령자를 네 군데에 조성된 사회주택에 나누어서 수용 중
 - 주 3회 데이 케어(Day Care)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근에 사는 노인 봉사자들이 대상자에게 바느질, 수공예, 체조 등을 가르침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19/08/24/07345001/lansia-produktif-di-jakarta-dapat-bantuan-untuk-usaha>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19/08/24/11072021/menyiapkan-jakarta-sebagai-kota-ramah-lansia?page=all>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19/08/24/07465741/lebih-dari-1500-lansia-telantar-dirawat-di-panti-sosial-milik-pemprov-dki>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19/08/24/09052961/usia-senja-tak-membuat-nenek-73-tahun-ini-berhenti-berkarya>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다문화 도시 정체성 만드는 신규이민자 정착전략

캐나다 토론토시 / 사회·복지

다문화를 도시의 정체성과 발전 토대 및 발전 방향으로 삼고 있는 캐나다 토론토시는 신규 이민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사회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토론토 신규이민자 정착전략’(Toronto Newcomer Strategy)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 개발·시행

배경

- 토론토에는 매년 6만 명의 신규이민자가 유입되며, 2016년 시리아 난민 5천 명도 토론토가 수용
 - 통계조사에 따르면, 토론토 도시 거주자의 사용 언어는 총 140개이고, 거주기간 10년 이하인 주민이 50만 명
- 신규이민자의 정착과 통합 과정에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 존재
 - 신규이민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한계가 정착과 커뮤니티 통합에 장애로 작용
 - 대학 교육을 받은 신규이민자의 실업률이 캐나다 출신 실업률의 두 배이고, 신규 이민자 평균 소득은 캐나다 출신 노동자보다 3배 낮음
 - 토론토 무역위원회(Toronto Board of Trade)에 따르면, 과소평가된 신규이민자의 경제력이 매년 15억 캐나다달러(CAD)(1조 3,500억 원)에서 22억 5000만 CAD(2조 250억 원)로 추정
-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긴급하게 인식해 전략적 개발과 자원 투자
 - 리더십 공유, 강력한 협업, 체계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적극 도입
 - 청소년 프로그램부터 공중보건 클리닉,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제공, 취업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
 - 캐나다 이민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토론토 신규이민국’(TNO: Toronto Newcomer Office)이 토론토 내 다양한 지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신규이민자 전략을 이행

과정

- 2010년 시범정책을 시행하고, 3년 뒤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정착전략을 도입
 - 2010년 시정부는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토론토 신규이민자 시범정책’(TNI: Toronto Newcomer Initiative) 실행을 승인

- TNI 시행으로 신규이민자에게 도시 서비스를 인지시키고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성공적인 결과 도출
- 2013년 2월 시의회는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토론토 신규이민자 정착전략’을 승인
- 2014~2016 토론토 신규이민자 정착전략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정착전략 지원을 위해 기금 수령·지출 권한을 캐나다 이민국에서 토론토시로 위임
- 2014년 토론토시장 존 토리(John Tory)가 신규이민자 정책 중 하나로 ‘통합 도시를 위한 헌장’(The Integrating Cities Charter)에 서명
 - 2010년 유럽 35개 도시에서 창시된 <통합 도시를 위한 헌장>은 도시 내 모든 거주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민자들과 함께 통합을 형성해가며, 지역사회가 가진 다양성을 포용하겠다는 것을 공식 약속으로 천명하는 것
 - 비유럽 도시 중에서는 토론토가 처음으로 참여
 - <통합 도시를 위한 헌정>은 도시 정부에게 정책 입안자이자, 고용주이자, 상품·서비스의 구매자라는 세 가지 입장에서 모든 주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민자를 통합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성을 포용할 것을 요구

주요 내용

- 토론토 신규이민국에서 신규이민자 정착전략을 주관
 - 신규이민자 정착전략은 지역 이민자 파트너십(LIP: Local Immigration Partnership), 신규이민자 리더십 위원회(NLT: Newcomer Leadership Table), 4개의 전략축이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
 - 신규이민국의 주요 역할은 지역 이민자 파트너십과 긴밀한 소통, 신규이민자 리더십 위원회 관리·지원, 전략축을 바탕으로 한 전략 개발과 정책 구현
 - 성공적인 모델로 알려져 몬트리올도 몬트리올 신규이민자 통합관리국을 신설
- 지역 이민자 파트너십(LIP)
 - 지역 이민자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캐나다 이민국이 온타리오에서 처음 시행한 이후 캐나다 전역으로 확장된 프로그램
 - 지속가능한 솔루션 개발 계획에 주력하고, 계획 실행을 돕는 협업의 틀을 제공
 - 정부 기관, 커뮤니티 중심의 비영리·영리 단체로 구성되어 다양한 파트너십 촉진
 - 토론토 지역 동서남북을 관할하는 4개의 LIP와 이를 총괄하는 1개의 LIP를 시의 관리 아래에 둔 구조
 - 시가 협업 네트워크의 주체가 되는 가장 독특한 LIP 모델로 평가

○ 신규이민자 리더십 위원회(NLT)

- NLT는 병원·대학·교육청 같은 기관뿐 아니라 연방정부·주정부와 도시의 각기 다른 분야의 지도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이민자 정착을 돕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역할 수행
- 주택, 재무, 고용, 육아, 대중교통, 언어 수업,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 조치

○ 4가지 전략적 축: 노동시장 향상, 건강 증진·지원, 행정 서비스 접근 향상, 시민 참여와 커뮤니티 역량 지원

- 노동시장 향상: 신규이민자와 청소년 고용지원 활동에 중점
 - 고용·사회서비스국이 2012년에 발표한 ‘워킹 애즈원’(Working as One)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으며 고용시스템 개선으로 고용주와 구직자의 상호이익을 추구
 - ‘토론토 강한 지역사회 전략 2020’(TSNS 2020: Toronto Strong Neighbourhoods Strategy)으로 확대 시행
- 건강 증진·지원: 신규이민자가 건강한 상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
 - 이민자의 정착 전후 건강상태 차이가 큰 문제와 캐나다 의료시스템에 비용, 자격, 문화·언어 차이, 인식부족 등의 요인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원
 - 신규이민자 정착을 위해 시의 건강 부서와 협력 강화, 파트너십 촉진, 신규이민자 건강 프로그램 개발·구현
- 행정서비스 접근 향상(Improving Access to Municipal Supports)
 - 토론토시와 단체, 위원회 간의 협력으로 관련 정보와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
 - 매년 ‘신규이민자의 날’(Newcomer Day) 행사 개최, 커뮤니티 센터 중심의 도시 시설 내 신규이민자 서비스 강화, ‘토론토 통합 도시 액션플랜 2016~2020’ 실행
- 시민 참여와 커뮤니티 역량 지원
 - 새로운 이민자 요구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를 위한 강력한 파트너 네트워크 개발
 - 신규이민국은 2014년 이래 NLT 활성화로 지역 기관과 정부 리더들과 함께 통합사업 진행(예: 토론토 경제 노동 정부 간 위원회, 토론토 지역 이민자 고용위원회 등)

○ 의의: 정부차원의 신규이민자 통합 시도

-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부서 간 업무 조정, 사업 촉진, 문제 대응 절차 등을 수립·시행했으며, 난민정착 프로그램의 성공에도 이바지

<https://www.toronto.ca/legdocs/mmis/2013/cd/bgrd/backgroundfile-55333.pdf>

<https://www.toronto.ca/legdocs/mmis/2016/cd/bgrd/backgroundfile-97073.pdf>

<http://www.cupelocal79.org/2013/01/toronto-newcomer-strategy/>

고 한 나 통신원, hannahko0301@gmail.com

취약계층 주거 상실 심화에 대책 가이드라인 마련

독일 베를린시 / 사회·복지

독일 베를린시는 비싼 월세 등으로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주거 상실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여성·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인지함. 이에 따라, 최근 주거 상실 정책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 대책을 마련 중

배경

- 주거 상실자¹⁾ 증가는 베를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 베를린의 많은 해외 인구 유입으로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게 된 데에 더해,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주택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게 된 것이 주거 상실의 큰 원인
 - 이외에도 EU(유럽연합) 시민권자들은 EU 내에서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는 있어도 독일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 보장 권리를 누릴 수 없어, 자신의 수입원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주거 상실자로 전락
 - 그 외에도 난민이나, 한부모 가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주거지를 잃을 확률이 큰 상황

주요 내용

- 주거 상실 상황을 예방하고 주거 상실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개발·채택
 - 월세 부채를 정부 기구가 책임지고 떠안는 과정에서 베를린 전체 기준과 퀄리티 관리(Qualitätsmanagement)²⁾ 시행
 - 지역구를 포괄하는 사회주택 보조기구의 전문적인 콘셉트 설정 및 실행
 - 거리에 사는 사람들의 수를 포함하여 베를린 주택 비상 통계 도입
 - 2020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앨리스 살로몬(Alice Saloman)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연대의 밤’ 행사에서 베를린 거리의 노숙자 수를 확인할 예정

1) 노숙자(Obdachlose)와 주거 상실자(Wohnungslose) 간의 차이: 노숙자는 주거 상실자의 하위 개념으로 정해진 주거지가 없이 공원이나 지하철 역사 등과 같은 공공공간에서 숙박을 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한편 주거 상실자는 월세 계약서를 가지지 못한 이들로, 공공의 시설에서 지내는 사람들에서부터 친구나 지인의 집에 머무는 이들까지 포괄한다.

2) 독일 법(§ 36 para. 1 SGB XII)에 따라 집세 채무와 관련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개인은 구직센터(Jobcenter)나 사회 복지 사무소를 이용해 집세 부채 문제에 국가의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개인의 부채를 떠안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채 위임 과정의 전반적인 평가나 그 내용에 관한 질(質)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 돌봄의 집(Trägerwohnung) 재고 증대
- 코디네이션 센터를 활용한 연중무휴 추위 예방 계획 수립·조정
 - 베를린에는 1,200곳의 긴급 숙박 시설이 있으며, 이 중 250곳이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채택과 함께 600곳으로 늘리고자 함
- 도시 전체 제어 시스템의 일부로 기본 욕구 충족과 품질이 보장되는 숙박 시설 확보
- 병환이 있는 주거 상실자를 위한 ‘환자의 집’ 모델 제안, 평가, 안정화
- 진입 문턱이 낮은 의료 및 치과 진료 서비스 개발
- 어린이를 둔 가족이나 어린 주거 상실자, 여성 주거 상실자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도움 서비스와 특별 숙박 시설의 확대
- 주거 상실자를 위한 특별 숙소 건설
 - 보호된 시장 부문에서 이들을 위한 800~1,000개의 주택이 있지만, 상원은 이 수를 2,500개로 늘리고자 함
- 상원의 이번 주거 상실자 지원 정책은 27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매년 830만 유로(107억 9천만 원) 지원 예정

비판과 의의

- 기민당(CDU)과 독일대안당(AFD)은 9월 의회에서 이 가이드라인의 채택을 비난
 - 기민당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원인과 싸우지 않고 증상을 연구”하는 것이며, 주택 상실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지적
 - 또한, 기민당은 올해 제시된 좌파당(Linke) 카트린 롬프셔(Katrin Lompscher)의 5년간 임대료 상한 정책과 함께 이를 비판
- 반면 녹색당(Grün)은 주거 상실에 관한 이번 조치를 ‘큰 발전’으로 평가

<https://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9/pressemitteilung.831248.php>

<https://www.berlin.de/sen/soziales/themen/wohnungslose/>

<https://www.berlin.de/sen/soziales/themen/wohnungslose/strategiekonferenzen-wohnungsloshilfe/3-konferenz/>

<https://www.morgenpost.de/berlin/article227063767/Abgeordnetenhaus-debattiert-zu-Obdachloshilfe-BER-Antrag.html>

<https://bbu.de/nachricht/45326>

<https://m.tagesspiegel.de/berlin/berliner-wohnungsloshelpolitik-volkszaehlung-der-obdachlosen/24976538.html>

<https://www.neues-deutschland.de/artikel/1125716.wohnungslos-neues-konzept-fuer-neue-obdachlose.html>

‘민원편의·비리근절’ 공공업무 자택배달 서비스

인도 델리NCT / 행재정·교육

인도 델리NCT정부는 민원인들이 공공기관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과 복잡성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부패·비리 방지에 도움을 주고자 공공업무 자택배달 서비스를 시행

배경

- 정부 내 공무원 부패를 종식시키고 민원인의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는 정책
 - 현재 델리NCT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보통사람당(AAP: Aam Aadmi Party)³⁾의 창당 이념에 걸맞은 정책으로 평가
 - 공무원이 중개인과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부패를 방지하고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거나 오래도록 기다리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그림 1] 델리 공공업무 자택배달 서비스 홍보자료

주요 내용

- 민원인이 전화로 공공업무 자택배달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동 보조원이 찾아가 접수를 받고 발급된 서류는 우편으로 전달
 - 민원 요청은 헬프라인(1076번) 전화로 하고, 서비스 운영시간은 휴무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 Aam Aadmi Party(보통사람당): 반부패 운동가인 안나 하자레와 아르빈드 케즈리왈이 대규모 반부패 시위를 벌인 뒤 2012년 정당을 구성하고 2015년 선거에서 총 70석 중 67석을 차지하며 델리 정부를 구성

- 민원인이 전화로 방문일시를 지정하고 1회에 50루피(850원)의 수수료를 지불 (수수료는 직불·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음)
- 생체인식 데이터 수집기구를 지참한 이동보조원이 자택을 방문해 필요한 민원서류의 종류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접수
 - 해당 민원서류는 발급 후 빠른우편으로 배달
 - 민원 진행사항은 온라인에서 고유ID로 확인할 수 있으며, 요구·문의 사항을 휴대폰 문자로 받을 수도 있음
- 세계 최대 비자·여권 서비스 업체인 VFS글로벌과 3년간 운영계약을 체결해 서비스 제공
 - VFS글로벌은 24시간 운영하는 콜센터를 11개 지역에 설치하고, 가정에 방문해 민원을 접수받는 이동보조원을 고용
- 2018년 40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2019년 말까지 100개 분야로 확대할 예정
 - 1단계로 2018년 9월에 40개 분야에서 시작했고, 2019년 9월에 2단계로 30개 분야를 추가했으며, 연말까지 총 100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표 1] 델리 공공업무 자택배달 서비스 제공 목록(1~2단계)

단계	관리부서와 자택배달 가능 민원
1단계	수익·세무부서: 카스트 관련 증명서, 거주지·소득·출생·사망 증명 등, 토지권리나 신용 관련 증명 등 사회복지부: 가족수당, 장애인·노령 연금 등 신청 운송부: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소유권 양도, 담보계약 관련 서류, 운전면허증 관련 서류 등 수도국: 신규 수도관·하수관 연결 신청 등 수도 사용에 관한 민원 식량공급부: 식량배급 우선권 카드 발급 관련 민원 노동부: 승강기·기계설 설치 승인, 상점 설립 신청 등 소수민 복지부: 소수민 학생 문구류 구입 지원, 수업료 상환, 장학금 등 신청
2단계	노동부: 노동계약 허가 승인, 승강기 작업 허가 승인, 기타 고용·인증 관련 민원 델리관광개발조합: 관광 패키지 예약 취약계층 복지부: 취약계층 학생 장학금 신청 등 고등교육부: 고등교육 신탁기금의 고등교육·기술개발 보장제도 등 관련 지원제도 신청 식량공급부: 저소득층 식량배급카드 관련 업무 등 운송부: 운전면허증 관련 업무 추가, 자동차세 납부 등 관광부: 숙박시설 등록 델리교통공사: 노선버스 등의 통과증 발급 약물 관리부: 의약품 판매 허가 승인, 처방전 예외 의약품 판매 허가 승인

효과와 전망

-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닐 필요 없이 복수의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음
 -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빠르며 공무원의 부패방지 효과도 기대
- 다른 주의 협조가 필요한 민원은 지연되는 문제 해결 필요
 - 다른 주의 서면승인이 필요하지만 해당 주의 관련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없을 때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 빈번
 - NCT정부는 다른 주의 승인을 받은 문서를 접수·정리하는 과정을 완화하는 중

http://ar.delhigovt.nic.in/sites/default/files/All-PDF/RFP_DSDPS_0_0.pdf

<https://www.indiatoday.in/mail-today/story/delhi-govt-doorstep-service-delivery-number-1336263-2018-09-10>

<https://www.zeebiz.com/india/news-how-to-get-delhi-doorstep-delivery-of-services-full-list-of-services-residents-can-get-at-home-fee-62716>

<https://www.livemint.com/politics/news/30-more-delhi-government-services-now-available-at-your-doors-tep-1565578505695.html>

<https://www.indiatoday.in/mail-today/story/delhi-doorstep-delivery-of-services-is-wider-now-1597790-2019-09-11>

<https://sarkariyojana.com/delhi-govt-doorstep-delivery-services-list/>

박 효 택 통신원, korindo100@gmail.com

폐 매립지에 대규모 태양열발전소 짓는다

프랑스 보르도市 / 환경·안전

프랑스 보르도市는 매립 용량의 한계에 달해 자연정화 중인 폐 매립지 부지를 에너지 생산 전문기업 JPEE(JP Energie et Environnement)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JPEE는 이 땅에 태양열발전소를 건설해 35년간 운영하고, 시는 활용하기 어려운 빈 땅을 친환경적으로 재사용

배경

- 활용이 끝난 매립지를 민간 에너지 기업에 임대해 태양열발전소로 전환할 계획
 - 보르도 북쪽에 있는 라바흐트(Labarde) 쓰레기 매립지는 매립용량의 한도에 달해 기능을 상실한 채 수년째 자연정화 중인 빈 땅
 - 2015년 에너지 전문 기업인 JPEE가 직접 보르도시에 방치된 부지 7만㎡ 중 6만㎡ 면적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는 계획을 제안
 - JPEE가 사업 계획, 투자, 공사, 유지·관리, 발전소의 수명이 다했을 때의 철거까지 모두 맡아 하기로 하고, 시는 부지를 빌려주는 조건
 - 나머지 1만㎡ 부지에는 이미 모터사이클 경기장이 들어선 상태
 - 시정부는 JPEE에 해당 부지를 임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허가



[그림 1] 보르도 북쪽 쓰레기 매립지의 현재 모습, 민간의 출입이 통제

주요 내용

- 완공되면 프랑스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태양열발전소가 되고, 쓰레기 매립지를 재사용한 태양열발전소 중에서는 세계 최고 규모가 될 것



[그림 2] 프랑스에서 가장 큰 세스타스(Cestas) 태양열발전소

- 발전소의 예상 생산 전력은 최대 57MW, 예상 연간 총 생산 전력량은 75GWh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이는 약 5만 명의 연간 전력사용량을 감당할 수 있고, 보르도광역시 전체의 가로등을 일 년 내내 켤 수 있는 전력량이기도 함
- 친환경적일뿐 아니라 시와 기업 모두에게 이득
 - CO₂ 배출이 없는 친환경 발전으로, 연간 약 22,000톤의 CO₂ 배출 절감효과 예상
 - 시정부는 매립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은 사업권을 얻는 윈-윈 효과
- 4천만 유로(520억 원)를 투입해 2021년 완공 예정이고, JPEE가 35년간 사업권 보유
 - 2017년에 처음 언론에 관련 내용이 발표되었고 2018년에 건축허가가 승인
 - 2020년 겨울에 전력생산을 시작하고, 2021년에 완공될 예정

시사점

- 오염물질 때문에 일체의 건축이 불가능한 부지를 재사용할 수 있는 우수 사례
 - 매립량이 한도에 달한 쓰레기 매립지는 침출수·오염물질·유해가스 등의 문제로 재사용이 어렵고 일체의 건축이 금지
 - 하지만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오염을 가중시키지 않는 태양열발전소 유치는 기업과 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사례

<https://www.20minutes.fr/planete/2558551-20190707-bordeaux-immense-centrale-photovoltaique-ancienne-decharge>

<https://objectifaquitaine.latribune.fr/politique/2019-03-12/a-bordeaux-la-decharge-de-labarde-transformee-en-centrale-solaire-avec-dix-embauches-810368.html>

<http://www.bordeaux.fr/l32885/centrale-photovoltaique-de-bordeaux-lac>

김 준 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천연가스 사용 산업체 비율 연말까지 95% 달성

인도 델리NCT / 환경·안전

인도 델리NCT 정부는 대기오염으로 악명 높은 지역 내 산업부문 오염원 개선을 위해 화석연료 대신 천연가스(CNG)를 사용하도록 지역 사업체와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함. 그 결과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지역 산업체 비중이 연말까지 95%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기대

사회적 배경

- 민간기관인 에어비주얼(Air Visual)에 따르면 2018년 초미세먼지(PM 2.5) 기준으로 세계 62개국 수도 중 뉴델리가 세계 최악으로 선정될 만큼 대기오염 상황 악화
 - 연평균 농도 평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10\mu\text{g}/\text{m}^3$)의 10배를 초과하는 $113.5\mu\text{g}/\text{m}^3$ 를 기록하며 심각한 상황
- 미세먼지의 원인은 자동차 매연, 쓰레기 무단소각, 산업현장 매연, 축제의 폭죽 등이며 주로 10월 이후 주변 농촌지역 화전을 시작으로 겨울철에 특히 심화
 - 대기오염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일상생활에도 불편감 야기
- 지방정부는 지역 환경오염 완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정도가 심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최근 일부 수치가 개선
 - 특히 초미세먼지(P.M 2.5)는 2016~2018년 3년 기준으로 2012~2014년보다 25%가 완화되었으며 일부 개선된 점은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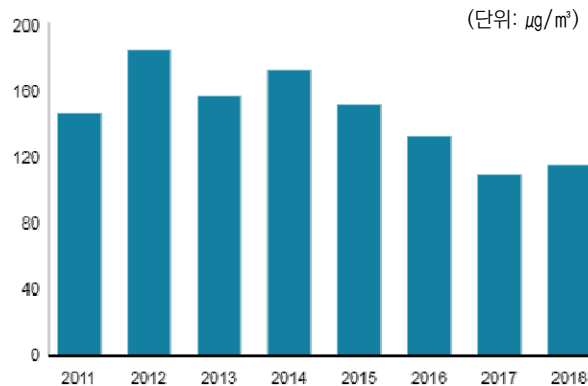
주요 내용

- 지방정부는 지역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압축천연가스 연료로 전환하도록 독려해 연말까지 산업체 95%가 천연가스 기반시설 전환을 완료할 예정
 - 지역 내 1,542개의 산업체 중 95%에 해당하는 1,457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연료인 천연가스 사용 전환 또는 진행 중
- 주요 목적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지역 대기오염 개선
 - 대기오염(PM 2.5 기준)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기준 22%, 겨울철 기준 30%가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며 대기오염 악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에 해당

- 평소에도 대기오염이 심할 때는 발전소를 제외한 화석연료 사용 산업체에 일시 폐쇄 조치를 시행
- 천연가스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산업체와 지속 협의해왔으며 보상금으로 대규모 산업체에는 10만 루피(170만 원), 중소기업체는 5만 루피(85만 원)를 지급
 - 나머지 산업체와도 협의 중이며 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 전환 예정
- 주변 권역들도 산업부문의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함에 따라 지역 대기환경에 도움
 - 서부 라자스탄주는 2015년부터 화력발전소를 폐쇄했으며 남부 바다르푸르 지역은 대기오염이 심화되면 화력발전소 운영 중단 및 디젤발전기 사용 중단을 권고

기대 효과

- 지역 산업부문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지역 내 대기오염 완화에 긍정적 영향 기대
- 대기오염 완화는 보건의료 측면에서 폐와 피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건강에 도움
 - 부가적으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석연료 대신 천연가스 이용으로 작업장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기여



[그림 1] 델리 연도별 초미세먼지(PM 2.5) 현황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49729291>

<https://dailypioneer.com/2019/state-editions/in-first-delhi-has-95--cng-powered-industry.html>

<https://energy.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oil-and-gas/95-coal-oil-driven-industries-switched-to-cng-in-3-months-delhi-govt-think-tank/71211277>

https://www.epw.in/journal/2019/36/special-articles/novel-approach-understanding-delhis-complex-air.html?0=ip_login_no_cache%3Db357072e65819f62335a29253e35eb1b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95-of-industrial-units-have-shifted-to-cng-delhi-govt/article-show/71208916.cms>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교통·건물 등 4대 분야 ‘기후변화 액션플랜’ 수립

미국 휴스턴시 / 환경·안전

미국 휴스턴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기후변화 액션플랜을 수립 중임. 교통·건물·에너지·폐기물 등의 4대 분야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지난 7월 초안을 발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최종안은 연말에 발표 후 2020년 시행 예정

개요와 배경

- 휴스턴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미국 대도시 중 하나이고, 기후변화의 피해가 심각
 - 2014년 기준 3천5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
 - 기후변화에 따른 허리케인과 홍수 피해가 심각
- 2017년 6월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에도 불구하고, 휴스턴시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동참할 것이라 발표
 - 파리 기후변화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액션플랜 수립
- 휴스턴시 기후변화 액션플랜 수립 목표
 - 휴스턴시의 온실가스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수립
 - 2014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저감, 2040년 75% 저감 후, 2050년 100% 저감해 탄소 중립도시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
 - 부가적으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이익 기대
 - 교통량 감소, 대기 질 향상, 녹지 공간 확장, 삶의 질 향상,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 에너지 사용에 따른 에너지 비용 감소, 회복 탄력성 향상

주요 내용

- 기후변화 액션플랜은 교통 분야, 에너지 전환 분야, 건물 최적화 분야, 폐기물 관리 분야로 분류
 - 휴스턴시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보면 건물이 49%, 교통이 47%로 대부분을 차지 하며 폐기물이 4%를 차지
 - 액션플랜 수립에 시내 각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 분야별로 목표, 구체적 활동 내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 완수 목표연도 설정

○ 교통 분야 목표

- 전기차와 재생가능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확산
- 1인당 주행거리 감소
- 공정한 운송수단 제공

○ 에너지 전환 분야 목표

- 지역의 태양광 발전 및 저장 확산
- 도시 경계 밖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확산
- 배출량 상쇄를 위해 그린인프라와 탄소 저장기술 확산

○ 건물 최적화 분야 목표

-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절약 최대화
- 에너지 효율 향상에 투자 확대
- 숙련된 지역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건물 에너지 운용의 최적화

○ 폐기물 관리 분야 목표

- 지속가능한 재료 소비 및 폐기방법에 관한 대중 인식 확산
- 폐기물 매립량 저감
- 폐기물 운용 및 관리 최적화로 보건·환경 보호

○ 기후변화 액션플랜 수립에 시민 참여 방안 마련

- 설문조사를 시행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기후변화 대응 우선순위를 조사
- 초안 작성을 위해 2019년 초부터 지역별로 커뮤니티 미팅을 개최하고 시민의견 수렴
- 2019년 7월 초안을 공개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

○ 향후 계획

- 2019년 9월 30일까지 시민의견 수렴
- 2019년 말 최종안 발표 예정
- 2020년 액션플랜 도입 예정

<http://greenhoustontx.gov/climateactionplan/>

<http://www.greenhoustontx.gov/climateactionplan/20190725-draft-CAP.pdf>

이 경 선 통신원, kyungsunlee14@gmail.com

‘임대료 인상 5년간 동결’ 더 강한 ‘상한법’ 시행

독일 베를린市 / 도시계획·주택

과도한 임대료 상승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미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 중인 독일 베를린市는 최근 더 강한 임대료 상한법 시행을 준비 중임. 임대료 상한선 책정과 앞으로 5년간의 임대료 상승 규제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

배경

- 갈수록 비싸지는 임대료 문제가 사회쟁점화
 - 임대료 상승 문제는 최근 베를린시의 가장 큰 이슈
 - 한 부동산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베를린시 평균 임대료는 2008년 1㎡당 5.6유로(7,300원)에서 2018년 1㎡당 11.4유로(15,000원)로 2배 이상 상승
 - 베를린 주정부와 각 정당은 오랫동안 치솟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과 제도를 발표
 - 이번 임대료 상한법은 작년 11월부터 구상한 내용의 초안이고, 지난 6월 18일 주요 요점을 발표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 잡음
 - 지난 4월 6일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에선 4만 명이 참가한 미친 임대료와 축출에 반대하는 공동 시위가 있었음
- 주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임대료 상한법(Mietendeckel) 최종안을 발표
 - 베를린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법으로, 베를린 적적녹연정¹⁾의 합의 끝에 최종 통과되어 주정부의 동의만 남은 상태

주요 내용

- 임대료 상한법의 기본 틀은 도시 내 모든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동시에 시정부가 정한 임대료 상한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
 - 일부 예외를 제외한 도시 내 모든 임대주택이 대상이며, 초안 발표일인 2019년 6월 18일 기준
 - 임대료 상한선은 2013년 베를린 표준임대료(Mietspiegel)를 따름

1) 사민당-좌파당-녹색당의 연립정부

- 표준임대료는 지자체별로 주택 정보(위치, 크기, 내외부 설비, 건설 연도, 친환경 설비 등), 주택 일대의 건설환경(소음, 밀도 등), 지역 주변 시설(공공시설, 교통 시설) 등의 다양한 기준을 비교하여 2년마다 작성
- 표준임대료의 120%를 초과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Wuchermiete)로 간주되며, 이 경우는 임대료 상한법 도입 9개월 이후부터 임차인이 지역 관청에 신청하여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임대료 상한선의 실제 사례
 - 임대료 상한선이 가장 낮은 주택은 1918년 이전에 지어진 중앙난방 시설이 없고, 욕실이 없는 주택으로, 1㎡당 3.92유로(5,100원)가 임대료 상한선
 - 임대료 상한선이 가장 높은 주택은 2003~2013년에 지어진 중앙난방시설과 욕실이 있는 임대주택으로 1㎡당 임대료 상한선이 9.8유로(13,000원)
- 임대 계약 중 일정 기간마다 임대료가 특정 비율로 상승하는 임대 계약도 임대료 상승이 불가능
- 새로운 임대 계약 체결 시에는, 이전 세입자가 냈던 임대료보다 비쌀 수 없으며, 임대료 상한법이 제시한 상한선을 넘길 수도 없음
- 예외사항
 - 시영주택회사 등이 관리하는 사회주택, 노숙자 지원주택, 기숙사, 2014년 1월 이후 처음 입주한 신축 주택은 임대료 상한법에 적용되지 않음
 -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1년에 1.3%의 임대료를 높일 수 있음
 - 주택 현대화 사업(배리어프리, 에너지효율 관련)은 공사비 분담금을 월세에 1㎡당 최대 1유로(1,300원) 부과할 수 있음
-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여전히 법적 검토 과정 진행 중
 - 개인 재산 보호에 관한 헌법 조항(1장 14조)을 위반한다는 일부 주장에 따라 법적 검토가 지속 진행 중
 - 법안 발표 이후에 임대료 상한법의 핵심 내용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주 정부 내 합의 과정 중에는 변경되지 않았음
 - 하지만 임대료를 낮추려는 임차인과 개인 재산 보호를 주장하는 임대인 간의 법적 공방 가능성이 있어 법안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존재
 - 법 위반 시 최대 50만 유로(6억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 가능

의의

- 나름의 의의가 있지만, 반작용과 예외 등의 우려가 있는 상태
 - 현재 새로 건설 중인 주택이 공급되기 전까지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고, 신규 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해 시장과열을 식힐 수 있는 기간으로 5년을 설정한 것에 나름의 의의가 있음
 - 베를린 시장 미하엘 물러(Michael Müller)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입자를 위한 짧은 휴식으로서 필수적인 법이었다고 법안을 옹호
 - 하지만 임대료 상승을 5년만 제한을 하는 것은 오히려 5년 이후 더 큰 역폭풍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임대료 상한법이 끝나는 5년 뒤에 새로운 임대료 제어 장치가 없다면, 더 큰 폭의 임대료 상승도 충분히 예상 가능
 - 현재 베를린에서 임대료 상한법 논의와 올해 말 결의를 앞두고 임대주택시장의 열기를 식히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하지만 다른 수많은 법안과 마찬가지로 현재 언급된 예외조항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위험의 소지가 있어 통과 이후 무용지물이 될 우려
 - 기존 다른 도시의 임대료 상한제나 베를린 시의 임대료 제동법(Mietpreisbremse)은 임대료 상승률 등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서 결과적으로 임대료가 계속 상승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베를린시의 임대료 상한법은 임대료를 올리는 것 자체를 막는 법으로 임대료가 계속해서 오르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https://www.immowelt-group.com/presse/pressemitteilungenkontakt/immoweltde/2018/die-mieten-in-deutschen-metropolen-explodieren-berlin-heute-doppelt-so-teuer-wie-vor-10-jahren/>

<https://www.morgenpost.de/berlin/article225942857/Mietendeckel-in-Berlin-Wie-lange-Berlins-Mieten-nicht-steigen-duerfen.htm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mietendeckel-in-berlin-so-funktioniert-das-9-80-euro-gesetz-a-1292609.htm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8099

<https://stadtentwicklung.berlin.de/wohnen/wohnraum/mietendeckel/>

<https://www.tagesschau.de/inland/mietendeckel-berlin-105.html>

세계도시동향 제466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19년 10월 21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판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

